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입춘이라는 기적

여 준다는데 있다. 지독한 굶주림에 내몰린 백성들의 분노적인 탐욕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불사하는 권력자들의 간악한 음모, 이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감잡을 수 없는 공포를 만들어 낸다. 공포를 가중시키는 것은 무지다. 대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 공포를 극단으로 끌어올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 앞에 엄혹하게 닥친 현실의 공포다. 이 공포 역시 무지에서 기인한다. 신종이라서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는 점, 보균 가능성 있는 이들이 확진 이전에 어디를 다니며 누구와 접촉했는지 완벽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 옆의 누군가가 보균자일지도 모른다는 점이 우리를 공포에 빠져들게 한다. 어쩌면 바이러스 자체의 전염력보다 이 공포심의 전염력이 더 강할지도 모르겠다.

실제 조선시대에 역병으로 목숨을 잃은 수만 명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의 우리는 예방 및 대처에 유용한 의료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고 상황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무지의 영역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어서 그로 인한 공포는 없을 수 없다. 문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공포심의 전염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나 기관이든 개인이든 대처의 내용과 시기에 아쉬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말은 아끼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감당하지 못할 선부터 인도주의도 문제지만 근시안적인 실리를 앞세운 혐오와 차별도 경계해야 한다. 막연한 공포 심과는 다른 '전전공공'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시경(詩經)의 '소민(小曼) 시에' '깊은 물가에 임한 듯, 살얼음을 밟듯, 전전공공하리'(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는 구절이 있다. 오늘날 매우 두려워 떨며 조심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전전공공'은 본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온 심혈을 기울여 신중하게 임한다는 뜻을 지녔다. 성호 이익(星湖 李翼)은 '성성자(惺惺子)라는 약부에서 남명 조식(南冥 曹植)의 '남달리 높고 혁혁한 기절(魁赫之氣節)이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전전공공하는 수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자신의 소견을 세울 때나 남의 말을 받아들일 때 사심을 거두고 공적인 이치에 맞는 지를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것이 '서경(書經) '여오(旅

粵) 편에 나오는 "뜻을 도에 따라 안정시키고, 말을 도에 따라 응대하소서(志以道導, 言以道撓)"라는 진언의 의미이다. 이어지는 구절인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신중히 하지 않으면 결국 큰 덕에 누를 끼칠 것입니다. 9인(卍, 72척) 높이의 산을 만들 때 마지막 한 상태기의 흙이 부족해서 모든 공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不矜細行, 終累大德. 廬山九仞, 功虧一簣)라는 말 역시, 전전공공의 태도를 강조한 것이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시점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최악에 이르면 바닥을 치고 반전한다는 것이 '역(易)의 가르침이다. 그 반전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든 개인이든 전전공공 신중하게 대처하는 뜻을 지녔다. 성호 이익(星湖 李翼)은 '성성자(惺惺子)라는 약부에서 남명 조식(南冥 曹植)의 '남달리 높고 혁혁한 기절(魁赫之氣節)이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전전공공하는 수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자신의 소견을 세울 때나 남의 말을 받아들일 때 사심을 거두고 공적인 이치에 맞는 지를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것이 '서경(書經) '여오(旅

社說

이런 판에 선거운동이라니 '뿔이 중한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4·15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유권자와의 접촉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정당은 '대면 접촉 중단' 지침을 내려 당분간 현장 유세는 어렵게 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잇그제 예비 후보자들에게 오는 7일까지 8일간 선거 운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 재래시장이나 번화가 등 다중이 왕래하는 곳에서는 선거 운동을 중단해야 하며, 상가 방문이나 유권자 약속 등 대면 접촉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선거 운동이나 출퇴근 인사 등 대면 접촉이 없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선거 국면에서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자적인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의 당락에 가를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가 해당 기간에

진행되면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은 사실상 손발을 묶어 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별도의 패널티가 없어 모든 후보들이 지침을 따를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중국의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1만 7000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15명 등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따라서 지금은 선거 운동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신인들로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후보들은 약속, 명함 돌리기, 대화 등의 직접 접촉을 자제하는 대신 온라인 홍보와 정책 선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야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 운동의 일정 기간 중단을 약속하자 경선 일정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월 임시국회 초당적 대처로 유종의 미를

여야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 오던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어제 합의했다. 사실상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기를 30일로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분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감염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한다. 이어 민생법안과 선거구획정안, 경찰개혁 법안과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노태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가 뒤늦게나마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거의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서 긴급 방역체계 점검부터 정부기관 내 혼선, 대중국 외교, 경제 파장까지 정부 대처의 오류와 미비점을 짚고, 필요한 대책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감염 인력과 장비 확충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효율적인 감염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법 개정 역시 2월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 모처럼 열리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에 대처하고 밀린 민생 법안을 처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청춘특독



박지연 조대신문 기자

담배 연기 없는 '클린 캠퍼스'를 위해

다.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49.3%), '담배꽂초로 인해 오염된 교내 환경'(27.5%)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인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지독한 냄새에 시달린다. 특히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온 학생들이 냄새를 충분히 빼지 않은 채 강의실에 들어오는 경우, 수업 시간 내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간접 흡연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학내 흡연자 17.4% 중 5.8%는 '학내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답하는 동시에 답답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응답자는 "현재 학내 지정 흡연 구역이 너무 적어, 흡연을 할 만한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힘들다"고 불편을 털어냈다. 또 다른 응답자는 "흡연실에서 피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불편하다. 학내 흡연 장소가 덜 개방적인 공간에 있으면 좋겠다"며 지정 흡연 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학에서 지정한 공식 흡연 구역이 있

지만 수요에 비해 적을 뿐더러 흡연 구역이 인도나 강의실 근처에 있고,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학내 흡연자들은 지정 흡연 장소 외의 장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이 흡연구역으로 이용하는 장소도 금연 구역, 사람이 자주 지나는 거리 등이어서 문제가 많았다. 학내 흡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 내 흡연 문제와 갈등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캠퍼스 내 흡연 부스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 조선이공대학이나 전남대학교의 경우 야외에 개방·밀폐형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을 분리했다. 이들 대학에서는 흡연 부스 설치로 학우 간의 갈등과 캠퍼스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의 대학이 흡연 부스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필수 시설 외의 피담배 시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야만 건립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며, 건립을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또 하나의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흡연 부스를 설치해도 관성적으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흡연 부스의 설치만으로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흡연 부스는 기존에 행해지던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환경과 미관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비단 흡연 부스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흡연 규제의 기준을 만들어 비흡연 장소에서의 흡연 제재를 강화하면 흡연 부스 설치의 효과는 증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설치 전 주기적인 관리 계획도 미리 수립해 놓는다면 설치 후에 관리 부실에 따른 우려도 줄어든다.

아울러 올바른 흡연 에티켓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학내 흡연 부스 설치를 비롯해 흡연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 대학도 담배 연기 없는 '클린 캠퍼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지방세정의 자율성, 왜 필요한가?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 자치 제도의 한 축인 지방 재정은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조세 총액 대비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2018년 9월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주요 내용은 주민 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 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 선거 제도 개선 등이다. 전략 과제 중에는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이 들어 있어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같은 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 재정 분권 본격화 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했다.

올해로 완성되는 1단계 방안을 살펴보면 지방의 재정 부담과 기능 이양을 고려

하여 지방 소비세율을 2018년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회 분회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8조 5000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 획기적인 지방 재정 확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2 단계에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및 지방 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 수확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2단계 재정 분권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20조 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 대 3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그동안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 납부하던 개인 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신고가 두 차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환영하고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자치제 본질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조세 법률주의 하에

서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법률이나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조세를 새로이 부과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은 조례로 법정외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 3월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지방 분권 국가를 선언하면서 자치 재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체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 주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질적인 자치 재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효율성보다 민중의 가치를 우선하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지방 소멸의 문제,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머니가 더 커져 실질적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無等鼓

4·15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총선 열기는 예전 같지만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3.1%포인트)한 결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33%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보다 6%포인트 늘어난 것이며 최근 20주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추이를 감안하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무당층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기 효과'

'무당층 33%'라는 수치는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찍을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4·15 총선 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당층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기존 여야 정치권에 실망한 민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국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는 달랐다. 청년 실업과 경기 침체,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민생 경제는 어렵고 그나마 희망을 품었던 '한반도의 봄'도 오히려 멀어져 가고 있다. 정치권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 집권 세력은 통합과 포용을 통해 미래의 길을 열어 가지 못했고, 탄핵을 당한 세력은 반성과 혁신보다는 선동과 충돌로 일관했다. 국민을 갈라 분열로 내몰기도 했으니 '조국 사태'는 그 극명한 사례다. 무당층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무당층의 증가에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 정치권에 '메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4·15 총선 결과가 기존 정치권에 비판적인 무당층의 선택에 의해 갈릴 가능성이 높아 여야의 '혁신 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미래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당층의 표심이 정치권의 혁신 동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곡) (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